
복원력

Ⅰ. 금융기관	85
Ⅱ. 대외지급능력	102
Ⅲ. 금융시장인프라	105

1.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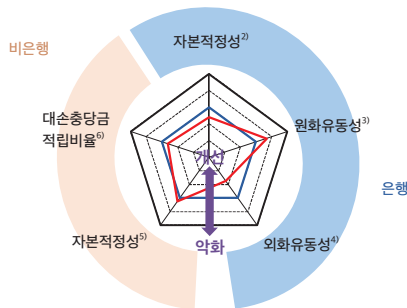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하였고,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도 모든 은행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개선되고 자본적정성도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내년 3월 예정된 각종 금융지원·완화조치 종료, 미국 테이퍼링 등의 영향으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그림 1-1).

그림 1-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 2020년 하반기 대상기간 — 2021년 하반기 대상기간



주: 1) 2020년말 대비 2021년 3/4분기말(은행 원화유동성, 외화유동성은 21년 10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

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4) 외화 LCR

5) 비은행 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6) 증권회사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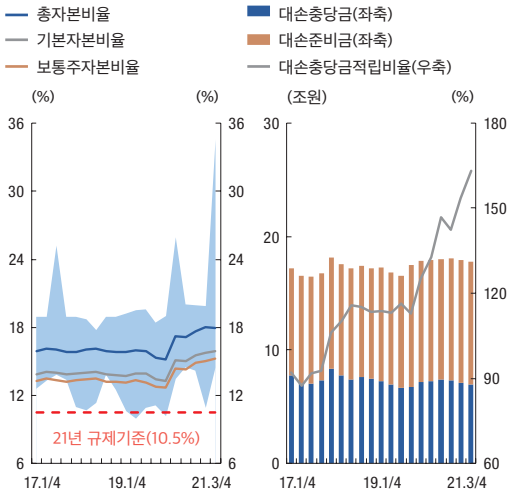
손실흡수능력 양호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17.98%로 전년말(17.15%)보다 0.83%포인트 상승하였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15.26%로 전년말 대비 0.98%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2021년 규제기준(10.5%, D-SIB¹⁾ 11.5%, 인터넷전문은행 9.25%)을 상회하였다. 대출 증가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되었으나 순이익 개선 등에 힘입어 자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었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163.1%로 전년말(146.8%) 대비 16.3%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대손충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과 함께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연장,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조치의 연장 등에 힘입어 고정이하여신이 더 크게 줄어든 데 기인²⁾한다(그림 1-2, 그림 1-3).

1)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로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이 해당한다.

2)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금융완화 조치 정상화 등으로 향후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드러난 부실률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대형은행들도 코로나19 위기로 증대된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BIS, 2021년 5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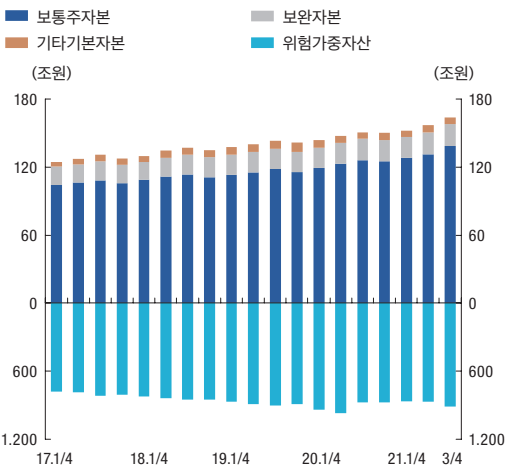
그림 1-2. 일반은행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¹⁾²⁾³⁾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¹⁾⁴⁾



주: 1) 기말 기준
 2) 2021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총자본비율 분포를 나타냄
 4)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2016년 3/4분기까지는 대손충당금에 대손준비금 포함, 그 이후에는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1-3.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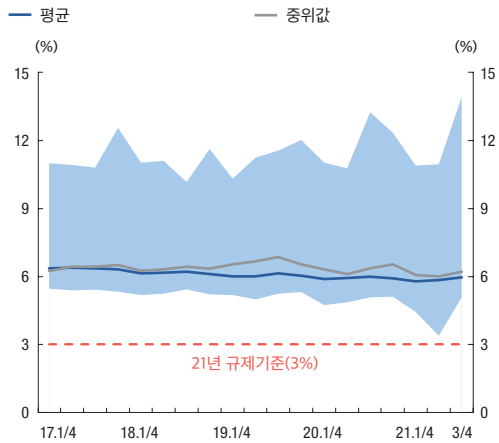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2) 2016년 4/4분기 이후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³⁾은 순이익 확대 등으로 자본 증가분이 총익스포저 확대를 상회함에 따라 2021년 3/4분기말 5.96%를 기록하면서 전년말(5.92%) 대비 0.04%포인트 소폭 상승하였다. 은행별로는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3%)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¹⁾²⁾³⁾



주: 1)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2) 2017년까지는 보조지표, 2018년부터 규제 시행
 3) 음영표시 영역은 은행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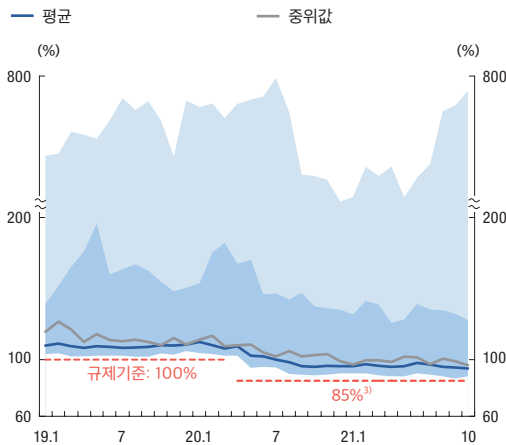
유동성 대응능력 양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21년 10월말 93.9%로 전년말(95.1%) 대비 1.2%포인트 하락하였다. 금년 들어 기업의 대기성 자금 증가 등으로 인해 순현금유출액이 확대되면서 동 금액이 고유동성 자산 증가분을 상회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100% → 20년 4월~22년 3월중 한시적으로 85% 적용)을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동 비율이 완화된 규제기

3)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의미하며,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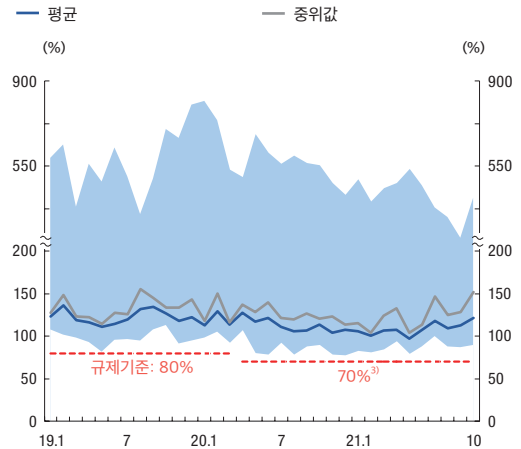
준(85%)에 근접하고 있어 내년초 LCR 규제 완화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그림 I-5). 외화 LCR⁴⁾은 2021년 10월말 121.7%로 전년말(107.3%) 대비 14.4%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80% → 20년 4월~22년 3월 한시적으로 70% 적용)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6).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⁵⁾(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1년 3/4분기말 110.1%로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I-1).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¹⁾²⁾



주: 1)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월평균 기준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LCR 분포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2년 3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¹⁾²⁾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월평균 기준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외화 LCR 분포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2년 3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표 I-1. 일반은행 NSFR¹⁾²⁾

	2020년				2021년			
	2019년	1/4	2/4	3/4	4/4	1/4	2/4	3/4
평균	113.5	111.7	111.6	111.1	112.2	111.2	111.7	110.1
중위값	111.3	111.9	110.1	109.4	110.3	108.2	109.6	106.9

주: 1)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2) 2021년 규제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 4) 외화 LCR은 바젤III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 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되었다.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비율은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19년 최종 규제기준(일반은행 80%)에 도달하였다. 한편 감독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은행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자산을 위기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화 LCR 규제비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하였다.
- 5)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NSFR은 2018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도입되었다(인터넷전문은행은 20년부터 적용).

참고 6.

핀테크·빅테크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88

일반적으로 신규 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많은 초기 고정비용과 함께 최저 자본금 요건 등을 비롯한 엄격한 금융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금융부문의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온라인·모바일 관련 기술, 데이터의 저장·처리 관련 기술 등 최근의 IT 기술의 발전이 금융의 디지털 혁신¹⁾을 유도하면서 금융업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졌다. 온라인·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굳이 점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금융업체와 수요자 간 다양한 접점을 형성시켰다. 데이터 저장 비용의 감소와 처리 속도의 향상에 따라 금융업체는 금융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설치하는 대신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SaaS: System-as-a-Service)하는²⁾ 등 금융시장 진입 고정비용이 크게 감소하였다.³⁾

이와 함께 정부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19년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9년 시행) 등을 통해 자격 심사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왔다.⁴⁾

연도별 주요 핀테크 규제 완화 정책 동향

연도	주요 내용
2015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2016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인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2017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시
	P2P대출 서비스 시행
2017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투자 자문·일임 허용
201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19년 시행)
2018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금산분리 완화 및 규제 적용 유예(19년 시행)
2019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오픈뱅킹 시행
2020	신용정보법 개정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202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기간 연장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

이로 인해 IT 기술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 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졌다.

1)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탈중앙화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 등과 관련된 금융 혁신 부분은 본고의 논의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 Gartner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의 SaaS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000억달러에서 2021년 약 1,50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3) 시중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차 점포 시설물 및 보증금 등 업무용 고정자산(21년 9월말)은 평균 2.4조원에 달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의 동 자산은 평균 27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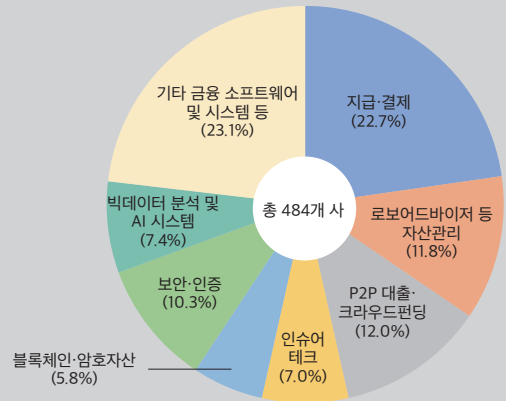
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규제 특례를 보장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서는 설립 최저 자본금을 은행법의 1/4 수준인 250억원으로 설정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 금융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바젤Ⅲ 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여 주었다.

(핀테크 기업)

인지도가 낮고 자본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해 전통적 금융중개가 아닌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금융시스템 일부를 개선·보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unbundling) 성장해 왔다. 핀테크 업체수는 2017년말 288개에서 2020년말 484개로 약 1.7배나 늘어났으며, 그 중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 업체 수는 110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및 머신 러닝(ML: 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robot-advisor), 대형 건물·주식, 저작권 등을 분할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투자(micro-investment) 서비스 등 자산관리 부분에서도 59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금중개와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P2P 대출 및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기업이 자체적인 자금 조달 없이 대출·투자자와 자금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이나 다른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B2B: Business-to-Business)으로 빅데이터, AI, 디지털 보안·인증 등 관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국내 핀테크 기업 비중¹⁾



주: 1) 2020년말 기준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0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빅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은 금융시장 진출 이전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 등에서 플랫폼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 차별화된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빅테크는 최대한 많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고객들이 플랫폼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⁵⁾를 증대시켜 왔다.

한편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 내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고객의 선호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왔다. 이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은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판매를 원할 때 일차적으로 방문하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5) 이용자가 많을수록 이용자 간 정보의 교환이 빈번해지고 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져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이용자 간의 양(+)의 외부효과를 말한다. 온라인 쇼핑몰(e-commerce), 차량공유 서비스(car hailing) 등의 이용자들이 상품 구매 혹은 서비스 이용 후 작성하는 상품평,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작성하는 콘텐츠 등은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주 통로가 된다.

네이버·카카오의 부문별 금융서비스 현황

	지급결제	예금수취	대출	증권	보험
네이버	O	X	O	X	X
카카오	O	O	O	O	Δ 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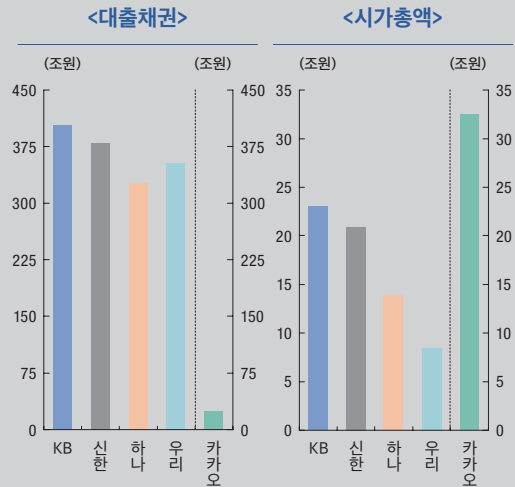
주: 1) 2021년 6월 디지털손해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12월에 본인가 신청

자료: 한국보험연구원,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2021
자본시장연구원,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분석", 2021

빅테크 기업은 금융시장에서도 플랫폼 중심 영업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장에서의 고객 기반 위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이용자 간 상호연계를 강화한다. 플랫폼 내에서 축적된 이용자의 소비행태에 대한 데이터는 다시 대출, 펀드,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제공 또는 추천하는 기반이 되어 이용자의 더 많은 서비스 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⁶⁾⁷⁾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금융시장에서도 여전히 효과적 것으로 평가된다. 그 예로, 카카오뱅크는 4대 금융주에 비해 대출 규모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주주사와 카카오뱅크의 대출채권 및 시가총액 규모¹⁾



주: 1) 2021년 3/4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이 밖에도 빅테크 기업은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로 고객의 금융정보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AI·ML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보 없이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중개가 가능해지는 등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⁸⁾

금융 여건 및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금융 여건의 변화)

앞서 살펴본 금융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은 특히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자금중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

6) 빅테크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 DNA 순환구조(Data-Network-Activities loop)라고 불린다. DNA 순환구조란 빅테크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플랫폼 내 이용자들의 활발한 활동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분석의 원천이 되며, 한층 정교해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용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뜻한다(Shin, "Big tech in finance: opportunities and risks", BIS, 2019).

7) 네이버파이낸셜과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온라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21년 7월).

8) Gambacorta, L., Y. Huang, Z. Li, H. Qiu and S. Chen, "Data vs. collateral", BIS Working Papers, No. 881, 2020

로 판단된다.

먼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matching)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장에서 예금자는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보관·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금 수요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점포를 찾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빅테크의 플랫폼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적합한 자금 수요자를 탐색하여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자금 공급자에게 소개(brokerage)하고 공급자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등 은행을 대체하는 금융중개도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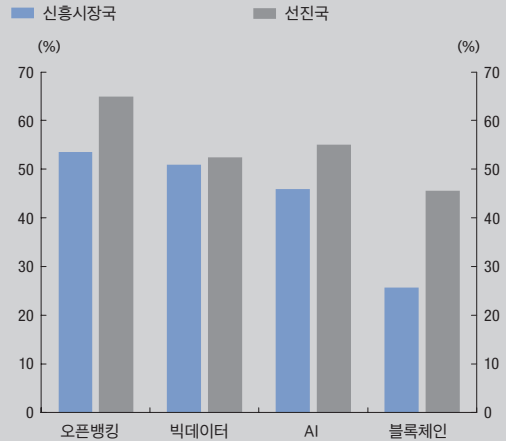
또한, 빅데이터 및 AI·ML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소비자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이 신용평가 분야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 등이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자금 수요자의 재화·서비스 구매, 소셜 미디어 활동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수요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⁹⁾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금융중개의 변화는 은행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은행의 최우선적인 자금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여전히 안전한 금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빅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은행의 예금 수신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은행 예금에 위협이 되는 디지털 기술¹⁾



주: 1) BCBS의 39개 신흥시장국 은행 및 42개 선진국 은행 대상 서베이 결과 (복수 응답)

자료: BCBS, "Impact of digitalisation and disintermediation of finance on retail banking", BIS, 2021

다음으로 금융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은행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주로 양호한 자금 운용처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신용평가를 통해 위험의 가격을 산정하며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우선 자금 수요자 탐색에 있어서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에 역할을 일정 부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용평가 측면에서도 금융정보 이외의 소비지출 등 다양한 데이터가 이전의 신용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이 늘어나면서 은행은 금융정보에 더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쟁력

9) 예를 들어,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사의 상거래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 모형에 카카오페이를 통한 구매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밝혔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들은 스마트폰 충전 주기, 메시지 수신 대비 발신 비율(이상 크레파스솔루션), SNS 팔로워 수, 사용 기간, 콘텐츠 수(이상 렌도)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 약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위험관리가 이전에 비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은행이 자체적으로 혹은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금융의 효율성은 증가하겠지만 은행으로서는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매우 복잡·다양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많은 대출을 취급(pooling)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의 위험관리가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은행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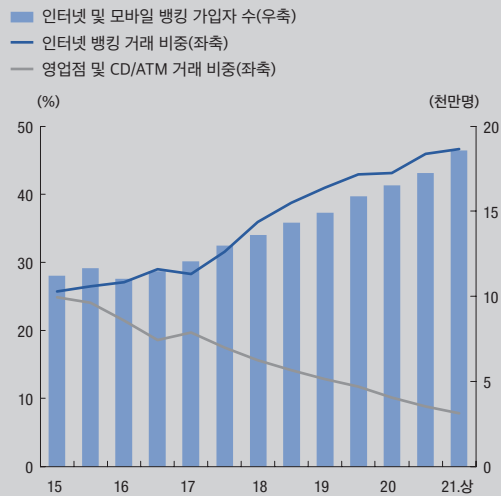
은행은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핀테크와의 협업을 실시·추진하고 있다.

은행은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신속성 및 편의성을 중시하는 수요에 맞춰 금융소비자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예금, 대출, 송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핀테크나 빅테크 플랫폼으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는 AI,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등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투자 또는 인수하거나 자체적인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를 신설하여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협업하고 있다.¹⁰⁾

한편, 은행은 빅테크에 대항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다양한 금융상품과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헬

스케어, 중고차 거래 서비스, 택배 방문 예약 서비스 등 비금융상품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만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금융·비금융 상품 제공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기까지는 금융규제 여건상 아직 제약이 남아있는 상황이다.¹¹⁾

시중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자 수¹⁾ 및 금융서비스 채널별 거래 비중²⁾



주: 1) 각 은행 서비스 가입자 수 합계(중복 가능)

2) 거래 건수 비중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10) KB이노베이션 허브, 신한 퓨처스랩, 하나 원큐 애자일(1Q agile)랩, 우리 디노랩 등 금융지주회사들은 핀테크 육성센터를 설립하여 유망한 핀테크 업체들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11) 금융지주회사의 원앱(one-app)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 이외 다른 영리 목적의 부수업무의 수행이 금지되고, 은행 앱에서 증권, 보험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28조에 따라 금융당국의 경영업무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원앱을 통해 디지털 유니버설뱅크(digital universal bank)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힌 바 있다(21년 10월 28일).

시사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시장에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진출하면서 금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혁신과 관련한 규제차익의 관점에서 기존 은행과 빅테크 간의 공정한 경쟁여건 (level playing field)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엄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은행이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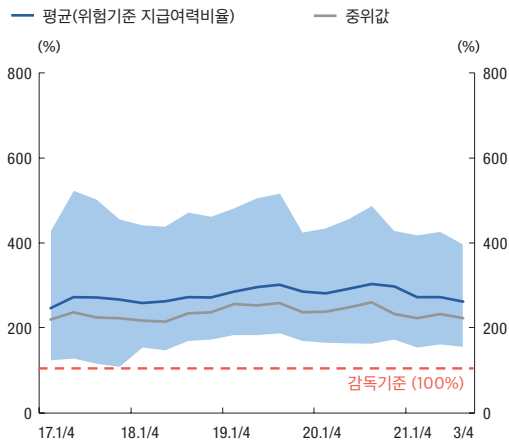
또한, 금융시장 재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빅테크 플랫폼의 영향과 은행 수익성의 관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사례에서처럼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질 경우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과도한 디지털 의존도 증가로 인한 사이버·운영 리스크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대체로 양호

생명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 기준 자기자본비율⁶⁾(RBC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262.2%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으로 전년말(297.3%)에 비해 35.1%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7).

그림 I-7. 생명보험회사 복원력 지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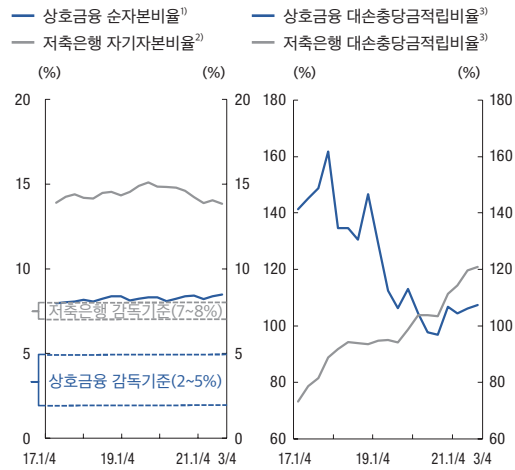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음영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업체별 RBC비율의 최대치 및 최소치를 표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8.5%로 전년말(8.4%)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07.5%로 전년말(106.8%)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13.8%로 대출자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말(14.2%)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으나, 대손충당금적립비율(120.9%)은 전년말(111.4%) 대비 9.5%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8).

그림 I-8.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주: 1) 감독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2)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3) 대손충당금/고정이하어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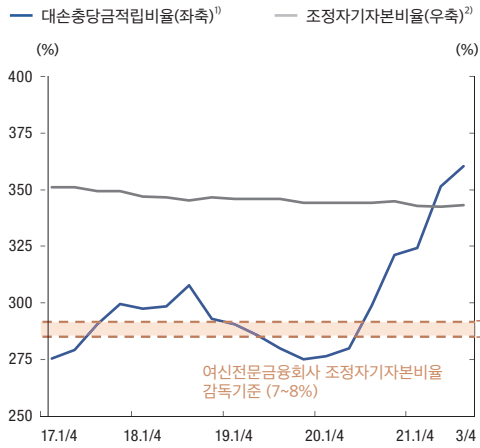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18.6%로 카드대금급 및 카드론 등 카드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말(18.9%) 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360.3%로 캐피탈사를 중심으로⁸⁾ 전년말(321.0%) 대비 39.3%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9).

6)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다.

7) 금년중 가계신용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급증함에 따라 2021년 3/4분기말 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94.4조원)이 전년말 대비 22.2% 증가하여 동 기간중 자기자본 증가율(18.9%)을 상회하였다.

8) 금년중 일부 캐피탈사가 대규모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림 I-9.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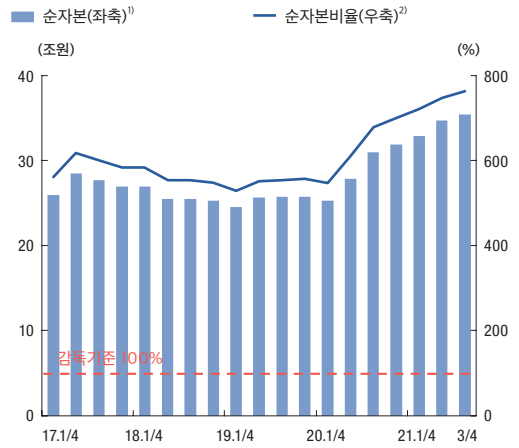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2)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762.7%로 주식시장 활성화로 인한 위탁매매 수수료 및 신용융자 관련 이자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말(698.6%) 대비 64.1%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10).

그림 I-10.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

2)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각 업권의 자본적정성이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들의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데다 부동산 관련 기업여신 취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외부 충격 발생 시, 이들 기관의 복원력이 악화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7.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6.8% 상승(21년 11월)하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 물가 오름세 확대는 수입 물가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등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¹⁾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3.7%(전년 동월대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통화정책의 조기 정상화 가능성을 증대시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²⁾ 투자자의 위험선호가 급변하면서 자산가격 하락, 디레버리징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확산세³⁾ 지속

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중국 경제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국내 성장률의 하방리스크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현 경제 상황에서 예상되는 향후 국내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① 인플레이션 충격과 ②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가 함께 발생하는 복합충격을 각기 가정하여 동 충격들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였다.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 점검

국내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는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향후 1년간 예상 인플레이션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동 확률분포 상위 10% 경계값⁴⁾(Inflation-at-Risk(이하 'IaR') 90% 분위)으로 정의하고 산출하였다. 미래 인플레이션 분포는 과거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수입물가, 실업률 갭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통적 필립스 곡선 분석에 기업신용 지수를 추가⁵⁾(augmented Phillips curve model)하고 이를 분위수 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⁶⁾

1)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는 경로는 2021년 7월 BOK 이슈노트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GDP대비 수출입 비중이 2000~07년 평균 56.4%에서 2010~21년 평균 79.6%로 늘어남에 따라 수출입물가 변동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2) BIS는 최근 보고서(BIS Quarterly Review, 21년 9월)에서 금융시장이 조그마한 기대 변화에 민감하게(hysterically) 반응하며 금리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snapback 리스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3)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최근 급증하는 신규 확진자 수로 인해 워드 코로나 정책을 축소하고 부스터샷 의무 접종, 거리두기 강화 등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4) 「Inflation and Activity: Two Explorations and Their Monetary Policy Implications」(Blanchard et al., 2015), 「Inflation at Risk」(Lopez-Salido et al., 2020)내 모형을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5) 기업의 재무상황(financial conditions)이 인플레이션 동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최근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업대출 등을 종합한 금융취약성지수(FVI) 기업신용 부문을 기업신용 지수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신용스프레드 확대(축소) 등 기업 자금조달상황 악화(개선)시 향후 인플레이션은 하락(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주석 4)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인플레이션 예상확률분포의 추정식과 설명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hat{Q}_\tau(\pi_{t,t+4} | x_t) = c_\tau + \hat{\alpha}_\tau \pi_{t-1} + \hat{\beta}_\tau \pi_t^{LTE} + \hat{\theta}_\tau (u_t - u_t^N) + \hat{\gamma}_\tau (\pi_t^R - \pi_t) + \hat{\delta}_\tau F_t$$

2001년 1/4분기~2021년 3/4분기 데이터를 이용한 분위수 회귀모형을 통해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확률분포를 추정한 결과, 국내 인플레이션의 상방리스크 및 진행경로의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는 2019년 이후 꾸준히 축소되었으나, 2022년 1/4분기(21년 1/4분기에 추정된 수치) 들어 확대 전환한 이후 2022년 3/4분기중에는 4.6%⁷⁾까지 높아졌다. 동 리스크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물가 및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며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확률분포의 우측 꼬리 부분이 과거 대비 한층 두터워지고 분포의 폭이 넓어지는 등 인플레이션 진행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추정 결과



주: 1) 4분기 전에 예측한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확률분포의 평균값
 2) 4분기 전에 예측한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확률분포의 90% 분위값
 3)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분기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 통계청

변수	설명	데이터 출처
종속변수	$\overline{\pi}_{t,t+4}$	t 시점에서 예측한 향후 4분기(t+1~t+4) 인플레이션 평균
	C_{τ}	상수항
	π_{t-1}	직전 4분기 인플레이션 평균
	π_t^{LTE}	기대 인플레이션
설명변수	$(u_t - u_t^N)$	실업률 갭 : 실제 실업률 - 자연실업률
	$(\pi_t^R - \pi_t)$	수입물가 상승률 - 국내 인플레이션율
	F_t	기업신용 지수
기타	\mathcal{T}	분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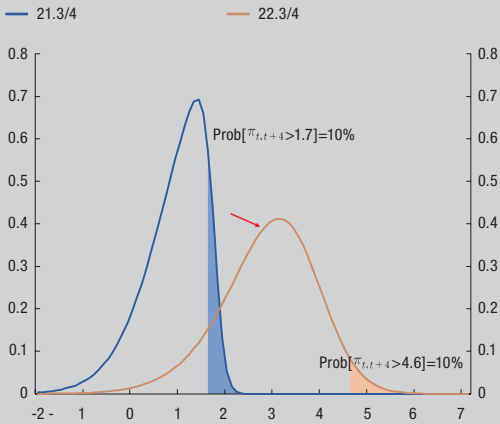
수정된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선형회귀모형(OLS)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C	π_{t-1}	π_t^{LTE}	$(u_t - u_t^N)$	$(\pi_t^R - \pi_t)$	F_t	R-Squared
0.89*	-0.02	0.83***	0.14	0.02**	3.19***	0.63
(0.47)	(0.15)	(0.23)	(0.30)	(0.01)	(0.73)	

주: 1) 2001년 1/4분기부터 2021년 3/4분기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2) ()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

7) 2021년 3/4분기에 추정된 향후 4분기(21년 4/4분기~22년 3/4분기) 인플레이션 확률분포 상위 10%수준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국내외 유관기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의 확률분포¹⁾²⁾



주: 1) 4분기 전에 예측한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예상확률분포
2) 가로축은 인플레이션, 세로축은 확률밀도함수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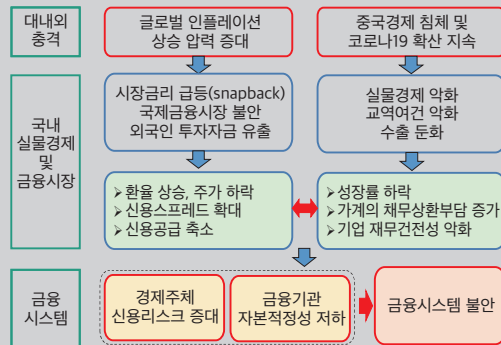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대내외 충격 파급 경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계 및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인플레이션 충격에 더해 코로나 변이 확산 및 중국 리스크 등으로 국내 성장률이 하락하는 복합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대내외 충격은 실물 및 금융경로를 통해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저하시키고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낮출 수 있다.

대내외 충격에 따른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 파급 경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현실화되며 상당기간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① 인플레이션 충격과 ②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가 함께 일어나는 복합충격⁸⁾ 두가지 상황을 가정하였다. 테스트 기간은 2022년 1/4분기부터 2023년 4/4분기로 설정하였다. 인플레이션 충격 시나리오에서는 물가상승률 3.0%(IaR 60%) 수준이 테스트 기간동안 지속되며 국고채(3년) 및 회사채(3년, AA-) 금리가 평균 3.6% 및 4.6%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제성장률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소폭 하향 조정하였다. 복합충격 시나리오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테스트 기간 평균 4.6%(IaR 90%)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고채(3년) 금리는 평균

8)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재차 크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 차질이 심화되고, 중국 경제 성장세가 부동산 부채리스크 등으로 둔화될 경우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가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IMF는 코로나19 상황과 이동제한 조치 등이 지속될 경우 세계성장률이 기대경로(baseline) 수준보다 -0.9%포인트(22년), -1.6%포인트(23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IMF WEO, 2021년 10월).

9)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의 둔화 정도를 감안하여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4.1%⁹⁾, 회사채(3년, AA-) 금리는 5.4% 수준으로 가정하였다.¹⁰⁾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실물 충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 167.7%, -93.2%포인트). 이와 같이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견실히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상승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거시-금융 변수¹⁾ 시나리오

(%,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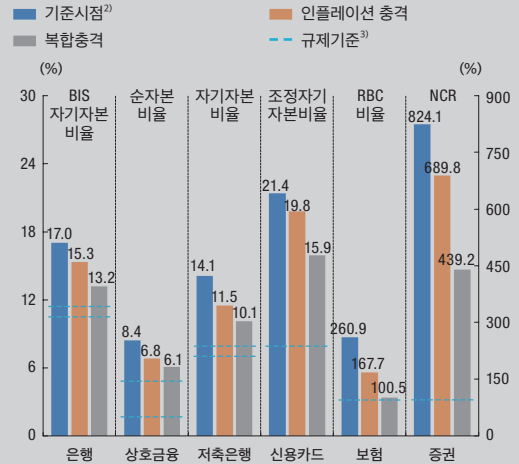
	2021년 3/4분기	테스트 기간 평균	
		인플레이션 충격	복합충격
인플레이션 ²⁾	2.6	3.0	4.6
경제성장률 ²⁾	4.0	2.2	1.0
국고채수익률 ³⁾	1.4	3.6	4.1
신용증가율 ²⁾	8.5	2.8	-1.7
신용스프레드 ⁴⁾	41	93	134

- 주: 1) 분기 평균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국고채(3년) 금리
 4) 회사채(3년, AA-) 금리-국고채(3년)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스트레스 테스트¹⁾ 결과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충격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하지만 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모두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으로 신용손실이 발생하지만²⁾ 이자수의 증가가 이를 일부 상쇄하면서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산 중 시장성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는 금리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자본비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260.9%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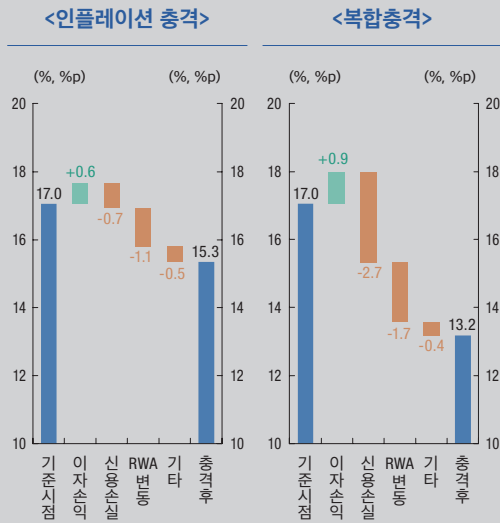


- 주: 1) 은행-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카드는 좌측, 보험-증권은 우측
 2) 기준시점은 2021년 2/4분기말
 3) 규제기준은 은행 10.5%(D-SIB 11.5%), 상호금융조합 2~5%, 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 카드 8%, 보험 100%, 증권 100%

한편 복합충격 시나리오 하에서는 전 금융업권의 복원력이 인플레이션 충격에 비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취급기관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차주 신용위험 확대로 신용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효과(-2.7%포인트)¹³⁾가 이자수익 증가 효과(+0.9%포인트)를 상회하며 평균 자본비율이 13.2% 수준까지 낮아질¹⁴⁾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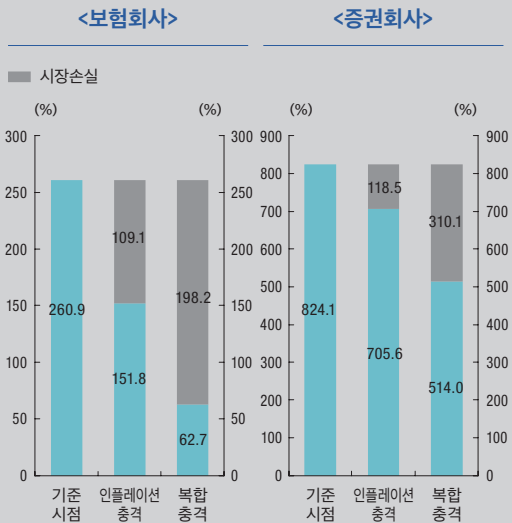
- 10) 경제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인플레이션, 콜금리, 경제성장률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신용증가율이 하락하고 신용스프레드는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1) 거시경제 및 금융충격이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당행이 구축(18년 하반기)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12)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도율은 충격이 없을 경우(baseline) 대비 각각 0.19%포인트 및 0.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13) 가계 및 기업의 부도율이 금리상승 및 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충격이 없을 경우(baseline)에 비해 각각 0.50%포인트 및 1.42%포인트로 크게 상승하는 데에 기인한다.
 14) 금리상승은 예대마진의 확대로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이자수익을 증가시키며 자본비율 상승요인이 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한 자본비율 하락 요인이기도 하다.

은행 자본비율의 변동 요인¹⁾



주: 1) 기준시점은 2021년 2/4분기말

시장손실이 자본비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¹⁾



주: 1) 기준시점은 2021년 2/4분기말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의 자본비율은 주가 하락, 신용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시장손실로 인해 각각 198.2%포인트, 310.1%포인트 큰 폭 하락하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경우 평균 자본비율(100.5%)이 규제수준(10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 보험회사 부채를 시가 평가하도록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비율 하락폭은 소폭 완화될 수 있다.¹⁵⁾

평가 및 시사점

향후 국내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그간 저금리 환경에서 자금을 조달·운용했던 금융기관 및 경제주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충격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기관 복원력에 적지 않은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여 향후 인플레이션 충격이 금융기관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점검한 결과,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더라도 경기회복을 동반할 경우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동반되는 복

15) 현행 제도에서 원가법으로 표시되는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금리상승으로 시가 평가 대상 부채의 할인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부채 규모가 축소되면서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성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

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손실,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는 시장손실 등으로 인해 자본 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은 향후 인플레이션 및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자산 중 시장성 유가증권의 자산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은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에 보다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해지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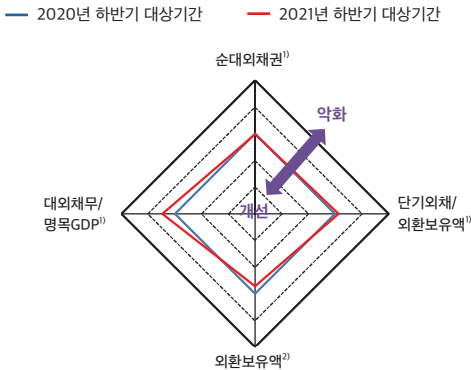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고,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은 단기외채에 비해 장기외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락하였다. 한편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액은 2021년 11월말 4,639.1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208.1억달러 증가하였으며, 2021년 3/4분기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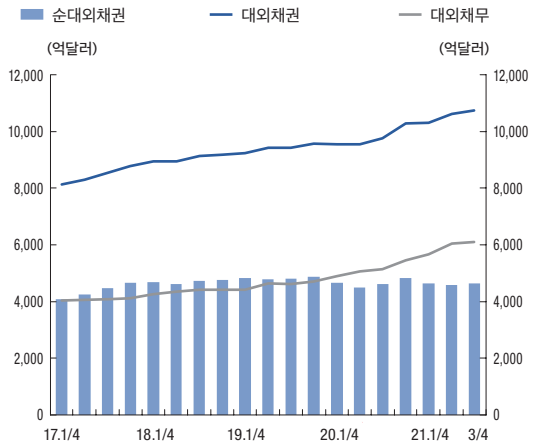


주: 1) 2020년 3/4분기말 대비 2021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20년 12월말 대비 2021년 11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순대외채권 증가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1년 3/4분기말 4,646.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0.4%(+18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2).

그림 II-2. 순대외채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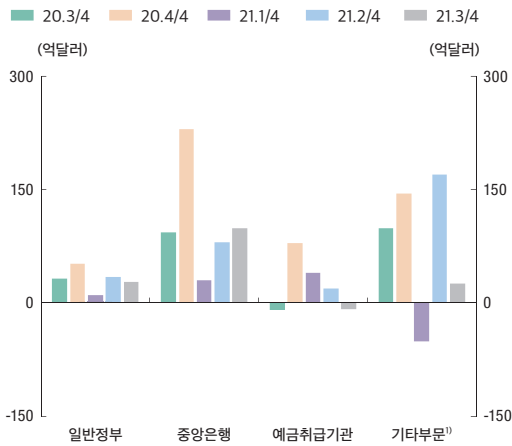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2021년 3/4분기말 1조 75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1%(+982억달러) 증가하였다.

금년 2/4~3/4분기중 대외채권 변동(+447억달러)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타부문이 외화예치금 및 무역신용 증가 등으로 195억달러 증가하였다.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확대에 따라 179억달러 증가하였다. 일반정부 및 예금취급기관도 각각 62억달러, 10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3).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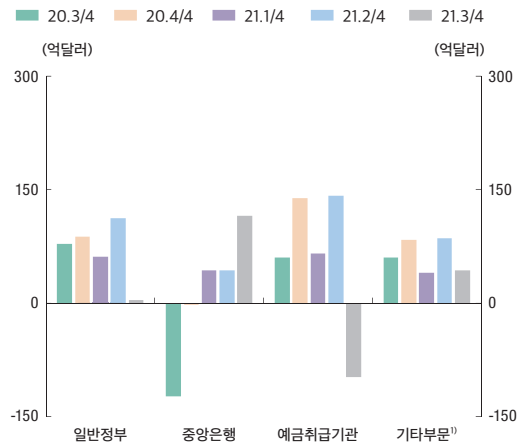


주: 1)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21년 3/4분기말 6,10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7%(+964억달러) 증가하였다.

금년 2/4분기~3/4분기중 대외채무 변동(+449억달러)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은행이 특별인출권(SDR) 배분 등으로 158억달러 증가하였다.¹⁾ 기타부문은 외화증권발행 등으로 129억달러 증가하였다. 일반정부 및 예금취급기관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각각 117억달러 및 45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4).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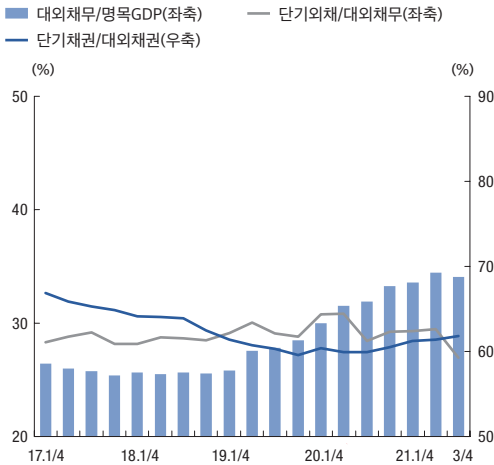
주: 1)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34.1%로 전년동기(31.9%) 대비 상승하였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은 26.9%로 전년동기(28.4%) 대비 하락하였다. 대외채권 중 단기채권 비중은 61.8%로 전년동기(59.9%) 대비 상승하였다(그림 II-5).

1) IMF는 지난 8월 23일 약 6,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쿼타(지분, 1.80%)에 해당하는 82억SDR(약 117억달러)을 배분받았다. 이는 외환보유액과 대외채무를 동시에 증가시킴에 따라 순대외채권에 대한 영향은 없다(IMF BPM6).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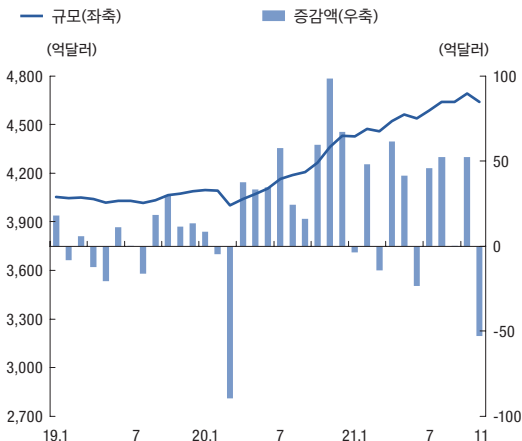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대체로 증가세 지속

외환보유액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및 IMF의 일 반배분에 따른 특별인출권(SDR) 보유 증가 등 에 힘입어 2021년 10월말 사상 최고 수준인 4,692.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11월말에는 4,639.1억달러로 다소 감소하였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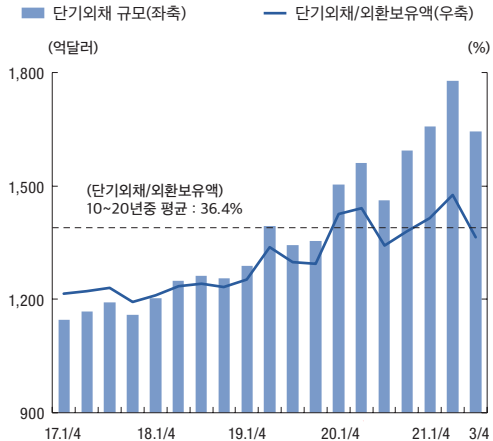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¹⁾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1년 3/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35.5%로 전년동기(34.7%) 대비 0.7%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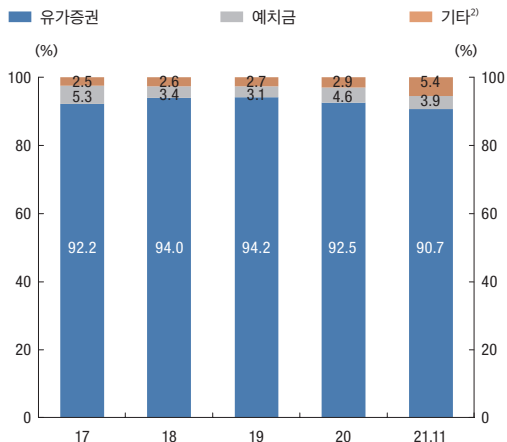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1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90.7%) 및 예치금(3.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 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¹⁾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III.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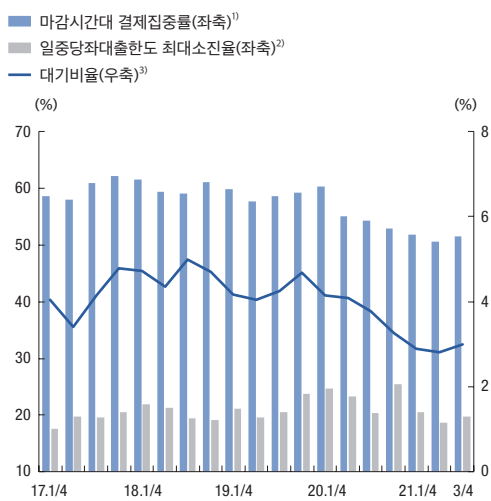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1년 3/4분기 중 501.7조원으로 지난해(423.6조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소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1년 3/4분기 중 각각 19.8%, 3.0%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3/4분기 중 51.5%로 전년동기(54.2%)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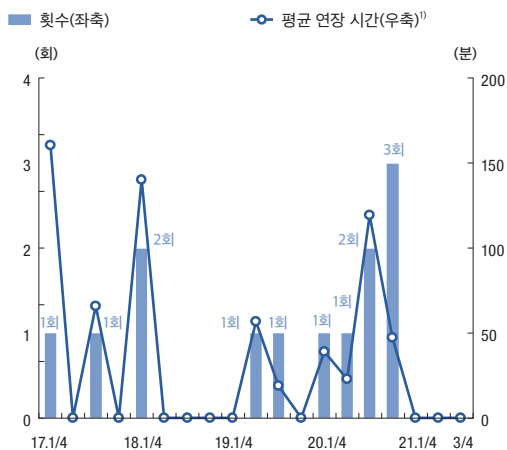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주: 1) 해당 기간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소소진율의 평균
 3)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 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1년 3/4분기 중 한은금융망은 마감시간 연장 없이 운영되었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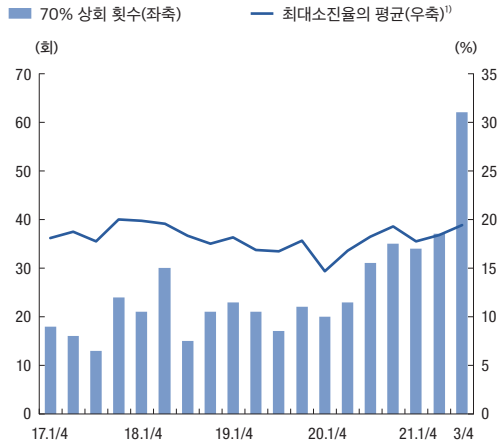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자료: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1년 3/4분기중 97.1조원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증가 등으로 지난해(80.2조원)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관련 결제 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¹⁾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4분기중 62회로 전년동기(31회)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3/4분기중 기업상장에 따른 공모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²⁾ 공모주 청약 및 환불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체가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순이체한도 소진율 평균도 2021년 3/4분기중 19.4%로 전년동기(18.2%)대비 다소 상승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 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1년 3/4분기중 229.1조원으로 기관간 RP, 주식, 채권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05.1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4분기중 장내국채, 장내국채 및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었다(표 III-1).

1) CD공동망, 타행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2) 2021년 3/4분기중 공모금액 합계액은 11.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배 증가하였다.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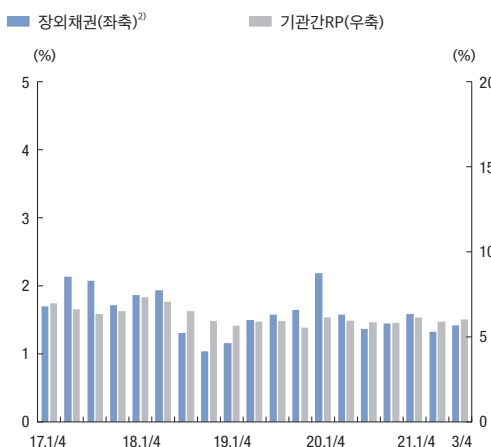
기준시한 ²⁾	비중(%)				
	2020년		2021년		
	3/4	4/4	1/4	2/4	3/4
장내주식	16:00	-	-	-	-
장내국채	17:00	-	-	0.014	-
장외 주식 기관투자자	16:50	-	-	0.0001	-

주: 1) 해당 기간중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기준

자료: 한국은행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의 비중이 2021년 3/4분기중 각각 1.4% 및 6.0%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4).

그림 III-4. 분리결제 비중¹⁾

주: 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결제금액 중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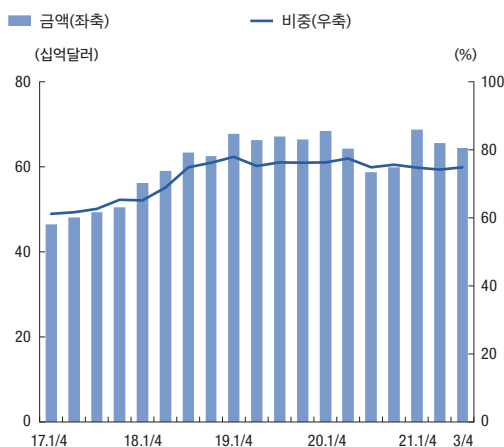
* 동일 종목을 매수·매도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여러건의 결제가 일방향의 단일건으로 처리되는 결제방식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외환결제시스템³⁾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시스템)⁴⁾의 결제금액은 2021년 3/4분기중 일평균 644.3억달러로 지난해(628.4억달러)에 비해 증가하였다.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1년 3/4분기중 7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I-5).

그림 III-5. CLS시스템 이용 금액¹⁾ 및 비중²⁾

주: 1) 분기중 일평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3)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4)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18개 CLS 결제통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8.

대·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전략」 공표, 「탄소중립 기본법」¹⁾ 제정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transition)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²⁾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대체로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이들 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수직계열화 구조³⁾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영향이 생산 구조상 하위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 대기업들은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⁵⁾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친환경 생산구조로의 전환

에 대한 비용부담이 커 대다수가 탄소중립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금융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 강화, 투자자들의 환경 이슈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녹색금융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 녹색금융은 자금조달 및 금융투자에 있어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한다. 녹색금융 시장의 활성화는 저탄소기술 개발 기업 등 기후변화 대응이 우수한 부문으로 금융자금이 집중되는 자금흐름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은 녹색금융의 활용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녹색금융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별로 녹색금융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현황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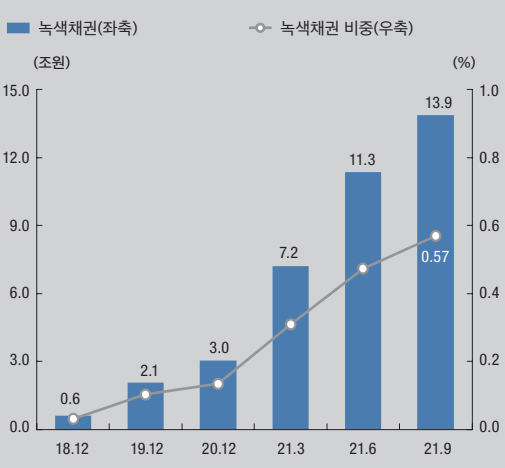
녹색금융 시장 현황

녹색금융 시장은 녹색채권 시장, 녹색펀드 시장, 녹색대출 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녹색채권, 녹색펀드, 녹색대출 시장 모두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증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 1) 「탄소중립 기본법」의 공식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다. 동 법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립,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2) 대표적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있다.
- 3) 정재한·홍장표(중소기업연구,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타 기계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은 업종 내 선도대 기업을 정점으로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로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계층화된 분업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 산업에서 최종생산물을 시장에 제공하는 대기업들은 1차 협력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고,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2차 협력기업은 다시 3차 협력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고 있다.
- 4)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내 중소기업 중 42.1%는 대기업 등 타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수급기업이며, 이들 기업의 매출 중 83.3%가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로 나타났다.
- 5)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 조사'(21년 4월)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기업 중 64.8%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 중이거나 대응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대응계획 방안으로는 '사업장 내 온실가스 감축투자'가 7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21년 2월)'에 따르면, 56.1%의 중소기업은 현재 '탄소중립 대응 관련 준비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며,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저탄소 공정개선·설비도입 관련 비용부담'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서 환경부가 규정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⁷⁾」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이다. 녹색채권 발행잔액은 2021년 9월말 기준 13.9조원으로, 2020년말(3.0조원) 대비 358% 증가하였다. 아직은 녹색채권 발행잔액이 2021년 9월말 기준 전체 채권 발행잔액(2,433.4조원) 대비 0.57% 수준에 불과하나 최근 민간기업⁸⁾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녹색채권 시장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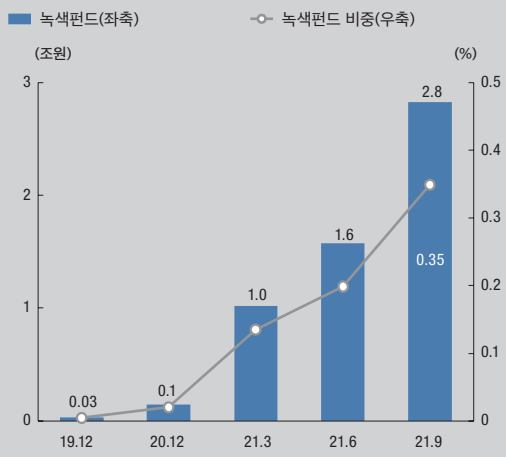


주: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녹색채권 발행잔액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녹색펀드는 펀드 구성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요소 외에 친환경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펀드이다. 녹색펀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대, 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을 증진시키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 국내 녹색펀드 순자산 규모는 2021년 9월말 기준 2.83

조원으로 2020년말(0.14조원) 대비 1,872%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체 공모펀드(810.1조원) 대비 비중은 0.35%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녹색펀드¹⁾ 시장규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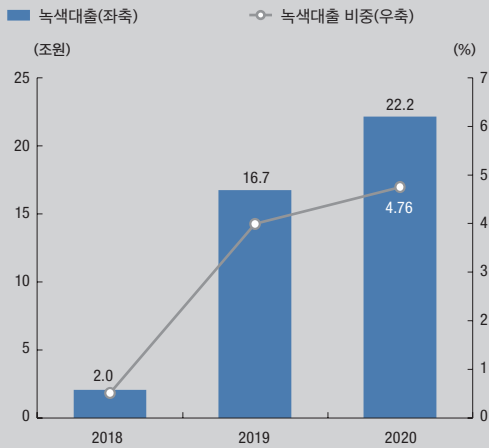


주: 1) 국내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중 주식 포트폴리오내 50% 이상을 친환경 부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펀드(모닝스타의 분류기준)
2) 펀드의 순자산 규모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녹색대출은 친환경 노력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및 한도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출이다. 은행들은 자체 혹은 외부기관의 환경성과 평가⁹⁾를 바탕으로 녹색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 기준 국내 녹색대출 잔액¹⁰⁾은 2020년말 22.2조원으로 2019년말(16.7조원)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2020년말 해당은행 기업대출(466.2조원)의 4.76% 수준이다.

7) 환경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채권 발행자는 (1) 조달자금의 사용 (2)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3) 조달자금의 관리 (4) 사후보고 등 4가지 측면에서 회계법인, 신용평가 회사, 컨설팅 회사 등 외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8) 2021년 9월말 기준 민간부문의 녹색채권 발행잔액은 10.9조원으로 2020년말(2.4조원) 대비 350% 증가하였다.
9) 외부기관 평가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 평가등급이 주로 활용된다.
10)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녹색대출 규모 기준이다.

녹색대출 시장규모¹⁾



주: 1)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녹색대출 잔액 기준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대·중소기업별 녹색금융 접근성 평가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녹색 프로젝트 기획, 환경정보 공시 등 환경요소를 별도 관리할 역량을 축적하고 있어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모습이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환경요소를 별도로 관리할 역량이 취약한 실정이라서 녹색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 프로젝트 투자 및 친환경 생산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녹색채권 발행 및 관련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잔액은 2021년 9월말 기준 10.9조원인 반면, 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은 전무한 모습이다.¹¹⁾

대·중소기업 간 녹색채권 발행현황 비교¹⁾

(개, 조원)

	대기업 ²⁾	중소기업 ²⁾	공공기관
발행기관 수 ³⁾	50 (84.7%)	0	9 (15.3%)
발행잔액 ³⁾	10.9 (79.0%)	0	2.9 (21.0%)

주: 1) 2021년 9월말 기준

2) NICE 평가정보(KIS-Value)의 중소기업기본법 기반 기업규모 분류 기준

3) () 내는 전체 발행기관 수 및 발행잔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아울러 대기업은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요소를 적극 관리하고 이를 대외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녹색투자 대상에 다수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을 통해 환경정보를 자체 공시하고 대외평가기관의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정보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환경정보 공시·평가실적이 있는 대기업은 765개 기업인 반면 중소기업은 137개 기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업은 평균적으로 'B'등급의 환경성과 평가를 받았으며, 중소기업은 'C'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환경정보 공시·평가 현황 비교¹⁾

(개, 등급)

	대기업 ²⁾	중소기업 ²⁾	공공기관
피평가기관 수 ³⁾	765 (84.2%)	137 (15.1%)	6 (0.7%)
평가결과 ⁴⁾	B	C	B+

주: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20년말 환경정보 평가 기준

2) NICE 평가정보(KIS-Value)의 중소기업기본법 기반 기업규모 분류 기준

3) () 내는 전체 피평가기관 수 대비 비중

4) 환경평가 등급(S, A+, A, B+, B, C, D)의 집단별 평균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1)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중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실시한 기업은 402개 대기업과 8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본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낮은 편이나 녹색채권 발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대기업의 주식은 환경정보 공시·평가 실적을 바탕으로 녹색금융 관련 인덱스 펀드에 다수 편입된 것으로 파악된다.¹²⁾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녹색금융 관련 지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621개 기업 중 463개 기업(74.6%)이 대기업이며 155개 기업(25.0%)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주식은 저조한 환경정보 공시·평가 실적으로 인해 녹색 인덱스펀드 투자 대상에서 상당수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¹³⁾

대·중소기업의 녹색지수¹⁾ 구성 현황

(개)

	대기업 ²⁾	중소기업 ²⁾	공공기관
지수구성 기관 수 ³⁾	463 (74.6%)	155 (25.0%)	3 (0.4%)

주: 1)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KRX ESG Leaders 150, KRX Eco Leaders 100, 코스피 200 ESG 지수, 코스피 200 기후변화지수, KRX 300 기후변화지수, KRX 기후변화 솔루션지수 등 총 7개의 녹색 금융 관련 지수 기준
 2) NICE 평가정보(KIS-Value)의 중소기업기본법 기반 기업규모 분류 기준
 3) () 내는 전체 지수구성 기관 수 대비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아울러 녹색대출이 기업들의 환경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요소를 별도로 관리할 역량이 취약하여 녹색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녹색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녹색대출의 금리 및 한도 우대 혜택을 비교적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및 향후 과제

투자자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녹색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자체 기후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해 녹색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녹색금융 활성화가 자칫 대기업으로의 자금 편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내 기업 수의 99.9%와 고용의 82.7%를 차지(19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친환경 생산구조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원활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G20 SFWG¹⁴⁾는 2021년 10월 한국을 포함한 20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G20 SFWG는 환경정보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

12) 녹색금융 관련 펀드는 액티브펀드와 인덱스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부족 등으로 본고에서는 인덱스 펀드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13) 한편,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체 중소기업(1,125개) 중 녹색지수에 편입된 기업(155개)은 13.8%이다. 상장기업 중 38.9%가 녹색지수에 편입된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의 지수편입 비중은 작은 편이다.
 14) G20 SFWG(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는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에 있어 제약요인과 해결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G20가 2021년에 새로이 설립한 워킹그룹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G20 SFWG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관리에 있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지침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및 금융당국은 G20 SFWG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대상의 환경정보 공시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녹색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¹⁵⁾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요소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 기업의 녹색금융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녹색금융 관련 자료의 공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동 자료는 시기적절하게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녹색대출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한다면, 정부 및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국내은행의 환경 관련 공시에 중소기업 대상 녹색대출 관련 항목이 없어 이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

15)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녹색금융 접근성이 제약된 중소기업에 녹색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